

“정부, 일제 강제징용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나서야”

“조사 결과 토대로 청소년 역사·인권평화 교육에 활용 필요”

“역사교육관 건립, 피해자 지원 법령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정부가 실태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 강제징용 근로정신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

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힘이 컸다”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여러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교육부 차원에서 ‘정신대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생존자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올바른 역

사 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인권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가칭)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건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 중 생존자 대부분은 연로하고 투병 중이다”며 “생존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전국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떨어져 1300원대를 유지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331.3원으로 한주 새 3.3원 떨어졌다.

전남 5년간 난방용품 화재 205건...인명피해 16명

일교차 커지면서 난방용품 화재 우려 높아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11월~2월) 화재 중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205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6명(사망 2명, 부상 14명), 피해액은 16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만 총 33건으로, 화목보

일러 20건, 전기장판 1건, 전기히터 9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열풍기 3건 등이 발생했다.

난방기기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무 등 땃감을 원료로 한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에 주의해야하고, 연통이 과열되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

어 보일러 가동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불, 베개 등) 등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장시간 사용은 자제해야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광주·전남 징계 교원 266명

강득구 의원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처벌 강화될”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187명, 광주에서는 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교사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장학사·장학관)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23명에 불과했다.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견책·불명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

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연등동 주민 “지하 굴착중 발생한 진동으로 생활 불편”주장

전남 여수시 연등동 일원에 20층 높이의 소형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주택가에서 암반 굴착에 따른 진동과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연등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311번지 등 3필지 3555㎡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18㎡형 173세대를 비롯해 25㎡형, 37㎡형, 40㎡형 등 전체 269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이 2022년 8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 한 달 만에 지하 굴착공사 중 발생한 진동과 소음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시·도의원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이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진단 실시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 협의해 줄 것을 시와 시공사에 주문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 방법 변경과 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차례 주민 현장 면담을 통해 민원사항을 청취했으며 세대별 계측기 설치, 안전진단 대상 확대 등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했다”면서 “시공사와 주민 간 중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